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소비처 확대 총력

전북도, 친환경 농업 육성전략 20개 단위사업에 554억원 투자

전북도가 올해 친환경농업 육성전략 20개 단위사업에 554억원을 투자한다. 도는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안정적 소비처 확대, ▲실천농가 경영안정,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이라는 3가지 큰 틀을 설정했다. 전북도는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소비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10개 사업에 205억원이 투자되는 소비처 확대는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소비처와 융복합 산업과 전환을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경영 안정도 도모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제, 유기질비료 공급,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 유기농업 자체 지원 등에 7개 사업에 342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친화적 농업기반 마련을 위한 생태순환농업 활성화 시범,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등 3개 사업에 7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미래세대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꾸러미 사업을 14개 시·군에 확대하

고, 유기 가공식품 및 친환경농산물 취급자의 인증 소요 비용을 신규로 지원해 가공 및 유통 주체의 경영비 부담을 낮춰줄 계획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임산부 및 출산 1년 이내 산모에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는 것으로, 지난해 전주, 군산, 익산, 순창 등 4개 시·군에서 올해 14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유기 가공식품의 제품 개발 및 생산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취급자는 건당 55만원, 유기가공식품 가공업체는 건당 100만원의 인증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전북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5,707ha로 전체 농경지의 19만 5,000ha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인증농가는 4,191호, 취급자 인증은 90업체, 유기가공식품인증은 68개 업체이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대하는 한 해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며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의 지속적인 소비 확대”를 당부했다. 한편, 전라북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5,707ha로 전체 농경지의 19만 5,000ha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인증농가는 4,191호, 취급자 인증은 90업체, 유기가공식품인증은 68개 업체이다. /유호상 기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도, 시·군·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 협업 추진 올해 서민층 1110가구·일반주택 1090가구 진행

전북도가 시·군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와 함께, 서민층 가구에서 사용 중인 LPG 고무호스를 안전한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의 가스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서민층 7만9,815가구(179억원)에 대해 시설개선을 완료해 가스사고 예방과 생활 안전에 기여했다. 올해에는 1,110가구(가구당 비용 25만8,000원)를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은 도와 시·군,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가 협업으로 추진해 수혜 가구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이며, 별도 구비서류 없이 각 시·군 가스

담당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주택에서 사용 중인 LPG 고무호스를 안전한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일부 소외계층에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농·어촌 등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확대 지원한다. 전북도는 서민층 가구 1,110가구(2억8,600만원)와 더불어, 일반주택 1,090가구(2억7,300만원)에 대해 개선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모든 가구는 자비 20%(약 5만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 신청은 2~4월 중 시·군별 시설개선 사업자가 선정된 후, 별도 사업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장애아동 지원 바우처 이용기간 12월 말까지 연장

전북도는 장애아동 사회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1월 말부터 장애아동 등이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를 당월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바우처 이용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성장기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와 장애 부모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장애아동 등이 이용하는 대표적 사회 서비스로, 올해 도에서는 58억5,800만 원을 투입해 2,71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의 일시휴업, 이용자가 가정의 자가격리 또는 외부활동 어려움 등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당월의 전자바우처가 소멸하는 불이익이 있었다. 이번 연장을 통해 앞으로는 매월 생성된 바우처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올해 12월 말까지 탄력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자격이 종료될 시에도 이미 생성된 바우처는 12월 말까지 연장해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2022년으로의 이월은 불가능하며, 내년에 발행하는 바우처의 이용기간도 연장되지 않는다. 서기선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을 통해 그동안 불편함을 겪었을 장애아동가족의 양육 부담이 경감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장애아동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신임 국무위원과 환담장 이동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후 신임 정의용 외교부 장관, 권철승(왼쪽) 중추벤처기업부 장관, 황희(오른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노후 지방도 일제보수 추진

전북도가 노후 지방도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에 들어간다. 전북도도로관리사업소(소장 권민호 이하 도로관리사업소)는 손상된 지방도 포장도로의 기존 포장층을 걷어내고 덧씌우는 사업 등에 50억원을 투입,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일제히 보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유례없는 폭우로 포트홀 등 지방도 손상이 다수 발생해 도로를 이용하는 도민의 많은 불편과 도로 유지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 포장 도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포장균열, 침하, 노후도 등 포장상태와 교통량 등을 감안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 올해 3월까지 실시계획을 마치고, 지방도 711호선 군산 대야 등 22지구 38km에 대해 6월까지 사업을 신속히 완료해 여름철 장마로 인한 추가적인 지방도 포장파손을 예방하고, 지방도를 이용하는 도민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도 덧씌우기 사업 및 포트홀 관리이력 등을 포함한 빅데이터를 구축해 사업에 활용할 계획으로,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방도 유지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권민호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노후 지방도 덧씌우기 등 지방도 보수를 철저히 추진해 도민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납세자 권리보호 앞장

지자체 납세자보호관 전담 배치해 고충민원·세무상담 874건 해결

전북도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전담 배치, 지난해 총 874건의 고충민원 및 세무상담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권리보호 요청, ▲사업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세무조사 연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고충민원처리 및 세무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전북도는 그간 납세자의 상담이나 요청이 있을 때 세무상담이나 관리구제를 지원했지만, 2021년부터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찾아서 미리 해결하는 적극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우선,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업상 어려움으로 폐업한 사업자에게 등록면허세, 주민세가 과세됐다면, 부과취소하고 환급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중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알지 못

해 감면받지 못한 납세자에게 지방세 감면이 있음을 안내하고, 이미 부과한 지방세는 납세자에게 돌려줄 방침이다. 도는 감면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세 관련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도민 누구나 전북도 법무행정과 납세자보호관(063-280-2887, 팩스 280-2929)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납세자보호관은 전북도 분청뿐만 아니라, 14개 시·군 법무팀 등에 배치돼 납세자들의 권익보호와 고충해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진관 도 법무행정과장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납세자보호관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및 소상공인 등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모집 전주교육대학교 우석대 원광대 군산대 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상담**

스피치·긴장해소·리더쉽·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복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누구나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김양욱 교수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도서관 편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
- 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가린, 단재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BN 출연 및 강사
- 스피치 칼럼리스트
- 평생교육사
- 심리상담사
- 전주매일 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케어' '스피치 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학교명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치료(주, 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주, 야간)	익산, 논산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과 리더쉽, 스피치지도사(자격증)	군산, 서원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치료 등)(주, 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야)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